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이원덕*

wdlee@kookmin.ac.kr

Contents

- I. 머리말
- II. 본론
 - 2.1. 신시대 한일관계의 규정 요소
 - 2.2. 한일 역사마찰의 메커니즘과 그 극복
 - 2.3. 한일신시대 구축을 위한 과제
- III. 맺음말

Abstract

新時代日韓關係は、米中兩強構図に再編されている東アジア國際システムのなかで、兩國が基本的価値と規範の共有に基づいて全分野にわたって全てのアクターによる全面的協力を求めている。日韓關係の新しい構築のため兩國が今後共同で推進すべき理念や価値を提示すれば、次のように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第一に、新時代の日韓協力を達成するためには兩國は未來志向的な姿勢で臨むべきであるが、他方で兩國の歴史問題に対する詳細な配慮が必ず必要である点を強調しておく。即ち、日韓關係における過去と未來は不可分の關係にあるといえる。第二に、日韓新時代は東アジア國家間の關係を國益の争いや勢力均衡という伝統的な構図のみで見ず、よりネットワーク的な世界政治の見方で眺め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即ち、日韓の緊密な協力關係の構築は既存の日米韓關係を強化することはもちろん、日韓中の友好關係とも背馳または矛盾しない方向で模索されるべきである。第三に、日韓新時代は日韓協力の方向を、既存のバイラテラル關係を中心とする考え方から脱皮し、バイラテラル、朝鮮半島、東アジア地域、そしてグローバル領域に渡る次元として認識することが最も重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即ち、日韓新時代は空間的に朝鮮半島、東アジア、グローバル秩序を總體的に眺める観点で求められるだろう。第四に、日韓新時代は安保—經濟中心の過去のパラダイムを越えて21世紀に入ってその重要性が増している文化、環境、知識情報、科学技術分野などでの協力をより積極的に推進すべきである。また、日韓協力の主体は、國家のみならず、市民社会、大学をはじめとする知識界、企業、地方自治体などの全ての領域に拡散させていくことがもっと重要である。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소속) 교수 국제정치학, 한일 관계를 전공.

이 논문은 국민대학교 2009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Key Words : 韓日關係、歷史摩擦、冷戰體制、脫冷戰、新時代、對日政策

(Korea Japan relations, history dispute, the cold war system, the post-cold war, a new age, policy toward Japan.)

I. 머리말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한일관계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시대 변천에 따라 한일관계의 성격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을 종속변수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대체로 동아시아 국제시스템과 양국의 파워관계 그리고 양국의 국내체제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분단체제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

물론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이러한 구조적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조적 변수와 더불어 한일 양국 정부 지도자의 리더십의 발휘 양상과 리더십의 발휘를 가능케 하는 국내정치의 역학(여론 포함) 또한 한일관계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한편으로 국제시스템, 양국의 파워 관계, 양국의 국내체제 그리고 남북한 분단체제라는 각 수준의 구조적 요소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양국정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행동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1) 전후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 틀에 관한 기존 논의는 이하를 참고. 이원덕(2005) 「구조전환기의 한일관계: 쟁점과 과제」 장달중·오코노기마사오,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최상용·이원덕·이민우(1998)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Koh, Byung Chul, *Between Discord And Cooperation: Japan and The Two Koreas* (Yonsei University Press, 2007). 木宮正史(2007) 「日韓關係の力学と展望: 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 金慶珠·李元德編 『日韓の共通認識: 日本は韓国にとって何なのか?』 東海大学出版会.

2)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 이외의 정치 리더십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호섭(2009년 여름)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Vol.29 를 참조.

<표 1>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소

동아시아 국제시스템	남북 분단체제	일본 국내체제	한국 국내체제	한일 파워관계
냉전체제 (1965-1989)	군사이념 대결	자민당우월체제	권위주의 체제	비대칭
탈냉전 (1990-2009)	화해협력 추구	자민당 중심 연립체제	민주화, 다원화	상대적 비대칭
미중양강 질서 (2010-?)	협력/갈등	민주, 자민 중심 양당체제	민주주의	상대적 균등화

위의 표는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먼저 제1시기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일관계가 냉전체제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안보, 경제적 결속을 강화시켜나갔다. 소련-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공산진영의 북방 삼각동맹과 대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추구했다. 이 시기는 한일관계에서 반공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양국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대립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수면 하에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³⁾

제2시기는 1990년 이후의 시기로 이 기간 동안 한일관계는 냉전질서의 해체로 인해 반공에 기반 한 결속력이 급속도로 이완되었다. 그 동안 잠복되었던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 위로 분출됨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마찰이 격화되었다. 한국의 정치사회 민주화와 한일 간 파워 격차의 축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대일정책을 추동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역사마찰을 심화시켰다. 한편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일 양국 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양국 관계라는 인식도 강화되었으며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3) 냉전시기 한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ee, Chong-Sik(1885)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Cha, Victor, D.,(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s*,(Stanford University Press).

제3시기는 대체로 2010년부터 펼쳐질 신시대 한일관계로 이 시기를 통해 한일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2010년을 전후하여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요소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 동안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래 1990년대부터 장기적인 시간 축 속에서 지속되어 온 추세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첫째,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제시스템에 근본적인 지각변동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대국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시스템은 미중 양강 구도로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약 20년에 걸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해 한일 양국 간 파워 관계가 비대칭, 불균등 관계에서 점차 상대적인 균등화를 향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일의 파워 관계의 상대적 균등화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의 상승에 의해 촉발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이후 일본이 이른바 ‘위기의 20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극심한 정치적 혼미와 경제적 침체를 겪음으로써 기인된 바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⁴⁾

셋째, 1990년대 이래 한일 양국의 국내체제가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체제수렴이 달성되었다는 점도 한일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⁵⁾ 한일관계에 있어서 이념 및 가치의 수렴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한일 간 역사마찰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회피, 완화시키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매우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양분으로서 기능해 왔다.

4) 木宮正史(2010) 『東アジア共同体と日韓関係』 東京大学校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主催 『国際会議：東アジア共同体と日韓の知的交流』.

5) 오코노기 마사오(2005)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 장달중·오코노기 마사오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2010년 이후 전개될 양국관계를 신시대 한일관계로 명명하고 신시대 한일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실천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신시대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신시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여전히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신시대 한일관계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그 구상을 구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서는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1998년 파트너십 선언을 넘어서는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의 채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한일신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II. 본론

2.1. 신시대 한일관계의 규정 요소

2.1.1. 미중 양강 구도의 등장

기본적으로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미중 양강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즉,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인 힘의 저하 속에서도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빠른 속도로 강대국으로 대두하는 있는 중국, 양국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의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⁶⁾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이 120년 전 청일

6) 2010년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내줬다. 이는 일본이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지 42년 만이다. 16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분기 GDP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명목GDP(달러 환산)

전쟁에 패배한 이래 일본을 경제 규모에서 앞지른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장기적인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15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예외의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이 예외의 시대 150년 간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하여 세계 열강국가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반면, 일본은 20세기의 전반기에는 군사대국으로, 그 후반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 위용을 떨쳤다.⁷⁾

19세기 이래 일본은 국가전략의 핵심개념으로 탈아입구론을 제창했으나 150년간의 예외의 시대에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를 신중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9년 일본에서의 민주당 정권의 출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려는 현실주의적 노선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 성장 동력의 상대적 상실, 고령화-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힘의 상대적 저하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예외의 150년을 경과하여 본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⁸⁾

는 1조2883억 달러로 중국(1조3369억 달러)보다 486억 달러 뒤졌다. 비록 2분기 실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올해 10%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분기를 기점으로 양국 간 경제 역전이 굳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지난해 GDP 규모는 5조 680억 달러로 중국(4조9850억 달러)에 간발의 차로 앞서 2위 자리를 지켰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GDP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불과했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라선 것은 중국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0%대의 가파른 성장을 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3년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동아일보』 2010년 8월17일.

- 7) 앵거스 매디슨의 역사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20년 당시에도 중국은 세계 GDP의 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계하고 있다. 한편 2030년에는 중국이 23.8%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3.6%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gus Maddison,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y Policy Review*, 2008(3). 田中明彦지음, 이원덕 역(2010) 『포스트 크라이스의 세계』 일조각, pp.76-79.
- 8) 2010년을 계기로 중국이 국내총생산액 규모에서 일본을 능가하게 된 현상을 두고 일본이 주도한 동북아의 근대사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중국이 군림하는 새로운 동북아의 현대사가 개막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동북아시아의 복원 혹은 전근대 국제질서로의 복귀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재정(2010),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회의 「한일여론 지도자 심포지움」에서의 기조연설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00년의 성찰』 동북아역사재단, pp.1-2.

이렇게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은 양국의 골 깊은 역사마찰을 창의적으로 극복하여 대 화해를 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친 전면적인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주도하는 냉전체제 하의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 노력을 통해 유럽공동체 건설의 주역을 완수했던 것처럼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역사화해를 기반으로 하여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공동체 수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2. 파워 관계의 상대적 균등화

1990년대 이후 한일 이국 간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차 이동하게 된 점 또한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던 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일관계는 전형적인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과거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 시기 한국정부는 대일관계 악화가 초래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과거사 쟁점이 핫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하여 일본에 문제제기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했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과거사 문제보다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이나 경제협력을 획득하는 일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 하에서 주요우방국인 일본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일행동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한국은 꾸준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선진경제국으로 도약했으며 한편으로 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달성하였다. 특히 1990년대 한국의 OECD가입은 한국이 비로소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후 한국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어 2010년 마침내 G20의 일원이 됨으로써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가령 일인당 GDP의 지표만 보더라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한일 간에는 9배의 격차가 존재했으나 이후 점차 그 격차가 좁혀져서 2010년 현재 약 1.5배의 차로 좁혀졌다. 일상적인 소비생활 면에서는 이제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를 느끼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일관계는 과거 일본의 일방적 우위구조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으며 삼성의 소니 추격 현상이 상정하듯이 일부의 산업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경쟁력을 넘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 파워의 상대적 균등화 현상은 정치, 경제, 산업분야를 넘어서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드라마, 가요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는 일본에서 한류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위력을 떨치고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보듯이 한국이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그 폭도 넓어졌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극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⁹⁾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도 한일관계는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의 정치, 경제 엘리트 간의 교류가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90년대 이후에는 시민사회, 지방, 대학생, 청소년 등의 각계각층으로 교류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교류 및 왕래의 양적 측면에서도 한일 간 균등화가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파워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균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한일관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2000년대 이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2005년 한일 간의 격심한 독도, 과거사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1.3. 한일의 체제 수렴화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한일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착실하게 달성시킨 결과, 선거에 의한 수차례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안착시켰다. 기본적인 인권은 놀라운 정도로 신장되었으며 사회경제적인 다원화, 자유화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뤄진 한일의 가치체계 및 규범의 수렴 현상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양국은 전후 줄곧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안전보장 정책의 중핵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로 취급되었으며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미국에게 있어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군사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미국과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각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의 담보를 보장하는 체제 안전판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대외적 군사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양국은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국가주도형 발전 국가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공산품의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취해 왔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은 급속하게 글로벌화 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민주와 자율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중요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시민사회는 정부 간 관계 못지않게 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시민사회의 교류 기반은 국익을 넘어선 인권, 평화, 환경, 인간 안전보장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근년 들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간 교류는 엄청난 폭과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양국의 국익을 넘어선 보편적 규범과 가치의 공유 기반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보장, 경제체제, 시민사회 등 제반 영역에서의 체제 수렴현상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이는 향후에도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적 발전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규모와 질적 수준이라는 양면에서 볼 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적인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양국 관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 한일 역사마찰의 메커니즘과 그 극복

신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에서 역사(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옥죄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시대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향후에도 당분간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마찰을 어떻게 다뤄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당분간 한일관계에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갈등은 반복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역사마찰은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과 전략적 대응 노력 그리고 지식인이나 미디어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빈도와 심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2.1. 한일 역사마찰의 메커니즘¹⁰⁾

한일 간 역사마찰의 발생 원인은 한일 양측에 공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일본 측의 원인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갖는 이슈의 중요성이나 민감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 무신경한데서 찾을 수 있는 반면, 한국 측은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잉 대응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사 문제나 독도 관련 움직임이 한국의 대일관계나 대일정서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연 일본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지닌 폭발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심각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마네 현의 독도조례 제정이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제1보인 1905년의 시마네 현 독도 강제편입의 역사를 연상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일본 지도자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독도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가져올 한일관계의 파장에 대해 일본 지도층은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지도자들은 헌법 문제, 자위대문제, 대북정책, 중국정책 등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일본 내 보수적, 우경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과거사 갈등이나 독도 영유권 마찰을 부채질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기라도 하듯이 일부 우익단체나 보수적 색채의 미디어는 한국과의 역사마찰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역사마찰 격화의 한국 측 요인으로는 과잉 대응의 구조와 대중 영합주의를 지적하고 싶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과거사 갈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외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나 독도와 관련된 이슈가 일본 측에서 제기되면 한국 측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초강경 대일정책을 구사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정권에 따라서 다소의 강약 차이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권도 일본 발 역사 쟁점 혹은 독

10) 이 부분의 서술은 이원덕(2006) 「한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모색」, 김영작, 이원덕 엮음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한울아카데미)의 내용을 축약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도 쟁점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초강경 대일정책은 한일 간 과거사 쟁점을 상승 작용시키는 정치권-매스컴-여론으로 구성되는 트라이앵글의 존재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과거사 이슈가 발생하여 이것이 외교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면 한국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일본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다. 매스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한국의 미디어는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의 과거사, 독도 도발에 대해서 걱정적으로 비난하고 분개하는 민족주의적 언설과 담론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게 된다. 한편 여론도 반일정서를 걱정적으로 표출시키며 때로는 일부 국민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격한 시위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도 반일정서가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트라이앵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국민적 여론이 일단 형성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권도 과거사 이슈에 대해 강경하고도 단호한 대일정책을 취하게 된다. 특히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권이 국민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과거사 쟁점에 대한 대일정책에 관한 한, 한국 정부가 나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역사쟁점이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이슈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는 우호-협력 관계(온탕)와 대립-갈등 관계(냉탕)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한일관계의 온탕-냉탕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클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관찰된다. 즉, (제1단계) 정권 초기에는 우호 친선 및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수립을 내세우지만 (제2단계) 어느 정도 시기가 경과되어 일본에서 과거사 갈등 이슈가 제기되면 대일정책을 초강경 방향으로 선회시켜 양국 관계는 전면적인 악화로 빠지게 된다. (제3단계) 이후 한일관계가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마찰을 수습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집권 초 대일협력을 다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 측의 ‘망언’이 나오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했으나 일본 측의 ‘우익교과서 파동’에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초기에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한·일관계의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급기야 ‘외교 전쟁’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수립을 표방하고 적극적인 대일 어프로치를 추구했으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서술 파동으로 일시적인 냉각기를 감수해야만 했다.¹¹⁾

2.2.2. 역사마찰의 해소를 위하여

한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차이나 독도문제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양국 간 역사-독도 마찰의 빈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나 해법은 단기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에서 독도, 역사 마찰이 격화되면 될수록 실효성 있는 해법이 제시되지는커녕 양국 간 국민감정의 충돌만을 초래하여 양국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파급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하다.

양국 간 역사마찰의 해결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국 국민의 역사인식의 상이가 역사 마찰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본다면 결국 마찰의 해결 또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일국이 타국에게 역사인식의 합치를 요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성과가 적다고 비판받고 있기는 하나,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역사인식의 갭을 서로 확인하고 그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역사마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단기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간 역사마찰이 초래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역사마찰의 해결이 어렵다면 관리(Management)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마찰의 관리란, 역사 마찰의 발생을

11) 이원덕(2008) 「한일관계의 온탕·냉탕 사이클」 『서울신문』 2008년4월8일 컬럼 <열린세상>.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억제하고, 만약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마찰이 양국관계에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처럼 역사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양국의 지도자 스스로가 역사마찰로 인해 양국관계가 훼손되고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것이 양국의 국가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질 때 역사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와 그에 기반 한 전략 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겸허한 태도와 피해자인 한국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관용적 태도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한일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중심적 국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가치의 공유야말로 이 지역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¹²⁾

2.3. 한일신시대 구축을 위한 과제

2.3.1. 한일신시대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¹³⁾

첫째, 무엇보다도 한일신시대 구축을 위해서는 한일관계사 100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일본은 20세기 초반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화 과정과 식민통치가 조선인의 의지에 반해 물리적, 제도적 강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자성을 평가하고 함께 새로운 공생의 역사를 창조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양국의 과거적시 자세

12) 이원덕, 앞의 논문.

13) 이 부분의 서술은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2010)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 :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중에서 기본구상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가필하였음을 밝혀둔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려 있음.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검색일 2010년12월30일) <http://www.mofat.go.kr/state/areadiplomacy/asiapacific/index3.jsp?TabMenu=TabMenu3>

와 관용의 정신은 한일 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45년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다. 한일 양국은 비구미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 다원적 사회문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 정착시킨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일관계는 식민-피식민 관계라는 불행한 역사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 추구를 통해 수직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킨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한국은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 민주주의, 성숙한 사회 경제체제 그리고 개발, 환경, PKO 분야들의 국제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 활력이 넘치는 사회, 창의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국은 공고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토대를 공유한다.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에 빈번하게 나타났던 역사마찰, 영토분쟁은 과거 회귀적 패러다임인 바, 양국은 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양국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문제, 역사왜곡 발언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역사마찰의 발생 시에는 그것이 한일관계의 전면적 악화로 파급,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동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일관계가 추구해야 할 미래비전으로서 한일관계에서 전면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일공생을 위한 네트워크는 한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 등 모든 주인공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생태 등 모든 활동 무대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공생 공영의 발전을 꾀하는 양국관계의 미래상이다. 한일관계에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심화되면 정치 안보 면에서는 갈등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추구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장차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2억 규모의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양국 간에는 시장과 경제체제의 장벽과 장애를 넘어 자본, 정보, 기술과 노동이 시장원리에 따라 보다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생태 영역에서도 한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보다 전면적인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한일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은 한일관계를 넘어서 점차 동아시아로 확산,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은 동아시아의 복합 네트워크 구축의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가치, 그리고 제도와 관행의 공공재를 함께 창출해야 한다.

셋째, 한일 양국은 21세기에 도래할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를 어떻게 조망하고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인식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대 강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가 냉전시기의 양극화로 치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한일 양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대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복합 네트워크를 짜기 위한 선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한일 양국의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냉전시기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의 노력을 통해 유럽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되었듯이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 화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 간의 협력은 물론 동아시아의 복합네트워크 및 지구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대외관계를 추구해 왔다. 한일 공생 네트워크 구축은 양국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일 공조도 강화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밀도 높은 우호협력 관계는 여전히 한일관계의 굳건한 토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일 공생 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모순되거나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은 한일공생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한일은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제도 및 관행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2.3.2.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의의와 한계

주지하다시피 1998년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기존의 한일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공동 서명하여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전후 한일관계사에서 볼 때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⁴⁾ 이 선언에서 한일 양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1998년 파트너십 선언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개념을 담는 형태로 구성되었다.¹⁵⁾

첫째, 일본의 과거 직시와 한국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화답하였다.

둘째, 한일 협력의 이념적 기반은 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이해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셋째,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양국은 1)양국 정치인 간의 대화 촉진 2)국제평화, 안전보장 분야의 긴밀한 협력

14) 1998년의 한일파트너십 선언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2008) 『신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심포지움-회상, 현안 그리고 비전』(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을 참조.

15) 한국 외교통상부(1998)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공동선언, 연설문 등 주요기록)』

3) 북한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문제 협력 4)경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5) 환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6)양국 국민 간의 문화, 인적교류 촉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1998년 당시의 국내외 정세 하에서 한국에게 요구되는 대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으로 정리한 획기적인 공동선언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 선언과 액션플랜 채택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래 한일관계가 진정한 우호협력의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후의 한일관계는 잇따른 역사마찰과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감정 대립의 악순환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한 채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2001년에는 일본의 우익 교과서 발간에 따른 충돌이 발생하였고, 2003년부터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그에 대한 반발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졌으며, 2005년 시마네 현의 독도조례 통과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져 나오므로써 한일 간에는 외교 전쟁을 방불케 하는 험악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마찰은 2006년부터 점차 진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역사교과서, 독도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돌이켜 보면 파트너십 선언은 김대중 정권이 IMF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일협력을 긴급하게 조달할 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와 함께 구상한 한국 발 대일정책 이니셔티브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파트너십 선언은 한국의 전체적인 미래전략 구상의 하위 개념으로 설계되었다기보다는 1998년 당시 한국의 대일관계가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발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3.3.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의 채택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세계정치의 새로운 사태가 속속 출현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세계 안보질서가 큰 변화를 겪

고 있으며, 2008년에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주요 선진국의 국내체제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강대국화가 예상외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마침내 2010년 내에 중일 간 경제규모의 역전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올 해 10월의 중일 간 센카쿠 분쟁¹⁶⁾에서 나타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변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힘의 직접적 과시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9년 9월,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성립되었다. 북한은 2010년에 들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3대 세습과 나름의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안보위험을 고도로 가중시키고 있다.

2010년은 한국 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8월10일 간 나오토 담화를 통해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표명되었고 문화재 반환, 사할린 교포문제, 강제연행자의 유골 반환 등 실질적인 전후처리 조치를 약속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전후 처리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예를 들면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명, 일제 시대 강제징용·징병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 식민지시대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에 대한 추가적 지원 조치 등이 취해진다면 양국 간 역사화해 분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천황의 한국 방한과 통절한 사죄표명, 재일교포에 대한 참정권 문제의 해결이 이뤄진다면 한일 간 화해 무드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⁷⁾

16) 2010년 10월 일본어선이 센카쿠 열도 부근해역에서 일본의 해안순시선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중일 간의 갈등으로 일본은 애초 중국인 선장을 장기 구금하는 강경조치를 취했으나 중국이 회토티류 금속의 대일수출 중단, 일본인 감금 조치 등의 초강경 조치로 대응함으로써 급거 일본은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결정하여 한보 양보했다. 이 사건은 일본이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힘을 앞세운 압박에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은 사건으로 해석되어 중일관계의 힘의 역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17) 이원덕, 정재정, 남기정, 하영선 대담(2010) 『한일관계 새로운 100년을 향해』 『일본공간』 제 8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를 참조.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제반 상황의 변화는 한일관계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전략을 담은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것이 한일신시대 공동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신시대 공동성명은 갈등과 반목에 의해 발목이 잡혔던 한일관계의 과거 회귀적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전후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패권국가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냉전 종결 이후에도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 북한 문제 발생, 중국의 부상 및 대량살상무기, 테러, 환경문제, 지역협력 그리고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등을 고려한다면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에 중심을 둔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 전략적 의미에서 공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냉전적 사고와 양자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중국의 부상, 한반도 통일 등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시야에 둔 복합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2010년은 지난 100년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나아가 앞으로 100년간 한일이 공유할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로서의 ‘세기적 전환점’ 이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한일 미래 비전의 설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 시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 의 형태로 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신시대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서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전 분야에 걸쳐 모든 행위자가 전면적인 협력의 추

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양국이 향후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시대의 한일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양국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즉, 한일관계에서 과거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미래 설계도 있을 수 없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미래 설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일신시대는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또한 한일 신시대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국익경쟁이나 세력균형의 전통적인 구도로만 보지 않고 보다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한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중일의 우호협력 관계와도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한일 협력의 심화야말로 향후 도래할 미중 양강(G2) 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한일관계의 심화, 발전은 대미, 대중관계의 강화와 선순환 관계에 있고 배타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셋째, 한일 신시대는 한일협력의 방향을 기존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자는 물론이고 한반도, 동아시아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한일 협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한일신시대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한일관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확장된 공간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신시대의 협력은 한일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 동아시아 지역차원, 글로벌 영역의 네 공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넷째, 한일 신시대는 정치-안보-경제 이슈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협력의 주체는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대학을 비롯한 지식계, 기업과 지방자치체 등의 전 방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한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공생에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2008) 『신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심포지움-회상, 현안 그리고 비전』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김호섭(2009)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Vol.29, 여름.
- 오코노기 마사오(2005)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로」 오코노기 마사오·장달중 『전후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원덕(2006) 「한일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모색」 김영작, 이원덕 엮음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5) 「구조전환기의 한일관계 : 쟁점과 과제」 오코노기 마사오·장달중 『전후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_____ (2010) 「한일관계 새로운 100년을 향해」 이원덕, 정재정, 남기정, 하영선 4인 대담 『일본공간』 제8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외교통상부(1998)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공동선언, 연설문 등 주요기록)』.
- 정재정(2010) 「한일여론 지도자 심포지움」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00년의 성찰』 동북아역사재단.
- 최상용·이원덕·이면우(1998)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2010)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 :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킹의 구축』.
- 田中明彦 지음 이원덕 역(2010) 『포스트 크라이스의 세계』, 일조각.
- 木宮正史(2007) 「日韓關係の力学と展望：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 金慶珠·李元徳 編 『日韓の共通認識：日本は韓国にとって何なのか?』 東海大学出版会.
- 木宮正史(2010) 『東アジア共同体と日韓關係』, 東京大学校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主催 『国際会議：東アジア共同体と日韓の知的交流』.
- Cha, Victor, D.(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h, Byung Chul(2007) *Between Discord And Cooperation: Japan and The Two Koreas*, Yonsei University Press.
- Lee, Chong-Sik(1885)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eimension*(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Maddison, Angus(2008)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y Policy Review.

『동아일보』 2010년 8월17일

『서울신문』 2008년 4월8일

- ❖ 투고일 : 2010. 12. 31.
- ❖ 심사일 : 2011. 01. 31.
- ❖ 심사완료일 : 2011. 02. 10.